

# WTO 기술규제 598건 ‘역대 최고’

## 친환경차·식품·전자제품 규제 급증

〈세계무역기구〉

산업부 “무역기술장벽 증가세 지속”  
美, 78건 통보, 전년대비 2배 증가  
식의약품 63% ↑ 라벨링·시험법 강화  
개도국 규제 확대... EAC, 식품 중심

연초부터 각국의 기술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술 규제가 가장 많았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월 598건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WTO 회원국들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 규제 선도국인 미국이 가장 상위에 차지했으며, 르완다와 케냐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를 비롯한 개도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5.6%), 화학세라믹 분야(15.9%), 전기 전자 분야(9.0%) 순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약품 등에 대한 규제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전기 전자 분야도 증가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어난 데서 기인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32건(22.0%) 통보했다. 미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는데,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해 전년 동기(42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3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정부는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노사발전재단

## 韓, 해외진출 기업 위한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노사발전재단은 해외 진출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 왔다. 이번 노무관리 안내서는 현지 노동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의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돼 자료의 전문성과 시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발간된 노무관리 지원자료에는 해외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현지 노동법령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무관리 전략이 포함됐다.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노무관리 자가진단 ▲표준근로계약서(내·외국인용) ▲현지 유관기관 및 노동 관련 용어 사전 등을 포함해 실무 활용성을 높였다.

최근 미국으로의 기업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가 새롭게 발간됐으며, 2023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을 반영한 ‘말레이시아 노무관리 안내서’도 함께 출간됐다.

또한, 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정리한 ‘인사노무 Q&A’와, 2023년 개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번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도 포함됐다. /세종=김대환 기자

## 농촌협약 지원 규모 확대 시군별 400억으로 늘린다

###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전용 절차 간소화 등 농지 제도 개선

정부가 농촌 협약을 통한 통합지원 규모를 내년에 4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전용 절차 간소화 등 농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및 난개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한다.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타부처 사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충남 예산의 한 농가를 찾아 과수 생육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2025년 5개소,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해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7년 만에 인상

농식품부,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 확대

정부가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한다. 기후변화 및 고령화 가속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 따른 대책이다. 정부가 친환경직불금 개편에 나선 것은 7년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비전환 촉진 ▲저투입농업 활성화 등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 후 농가는 유기 95만 원, 무농약 75만 원, 유기지속 57만 원이다. 유기지속 단가는 유기 단가의 60%, 유기전환 단가는 무농약 단가에서 유기단가로 변경한다.

지급상한면적을 확대(호당 5ha→30ha)하고,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친환경인증을 유지 시 지급하던 현행 제도가 신규농은 당년 5

월10일까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 후 10월까지 인증 유지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또 신규 친환경 비를 일반 비 대비 5%포인트(p) 높은 가격에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최대 15만t)한다. 비는 국내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 일반 비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농업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친환경비 공공비축 매입 전량은 근급식·복지용쌀로 공급해 시장교란 없이 친환경농산물 공공 수요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 15만t 매입 시 친환경 면적 3만 3000ha 증가, 쌀 생산량 2만 2000t 감축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신규 친환경 비 농가가 친환경 재배로 원활히 전환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과 친환경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친환경 비 농가가 당해연도에 친환경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기간을 기존 친환경 농가와 별도로 운영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농식품부, 올해까지 60% 폐업 전망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반년 만에 개사육농장 60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올해까지 총 60%가량(938호)이 폐업할 전망이다이라고 9일 밝혔다.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이다.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환경분야 전공 대학생 역량 강화 교육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측정분석·진로탐색 운영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환경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환경측정분석’과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학생 환경측정분석’ 과정은 환경측정·분석 분야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0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 과정은 수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측정·분석 이론 강의와 함께 시료 채취 및 분석 장비 활용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공공

연구기관과 민간 환경전문업체 소속 현직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학사 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장비를 직접 활용할 기회도 제공된다.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과정은 2021년부터 운영돼 환경 전공 대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진로탐색 과정에서는 환경산업 및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는 특강이 마련되며, 환경부 및 환경 관련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임직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환경업계의 주요 업무와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관련 공공기관 및 환경전문기업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